

여의도포커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울경+전남광주특별시 ‘남부벨트’ 수도권 1극체제 극복 모멘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1일 “민주당의 힘 지인 영남에서 외롭게 깃발을 꽂고 ‘낙동강 벨트’를 이끌어왔다”며 자신의 국회 부의장 도전과 관련해 “이제는 당이 대의명분을 선택해 달라. 당의 동진 정책을, 전국정당화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부울경이 통합되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함께 1200만 인구의 거대경제권 ‘남부 벨트’가 탄생한다”며 “지방이 수도권 풀림을 극복하고 잘 사는 기틀을 놓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에 출마했는데.
△몇가지 명분을 갖고 나왔다. 첫째는 3당 합당 이후 36년이 지났는데 정치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 부의장 기회가 4선까지 내려왔다. 영남지역 민주당 최초 4선인 제가 당선돼야 인력 균형 측면에서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겠다. 지방선거를 뛰는 당원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이자 실용주의 정부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특히 ‘5극 3특’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으로 가고, 부울경도 통합으로 간다. 국회도 인적 자원의 배치를 통해서 시대 정신인 5극 3특 정책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정치적 힘지라는 영남에서 외롭게 깃발을 꽂고 ‘낙동강 벨트’를 이끌어 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90년대 초중반부터 바위에 계란치기하면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깨는 씨앗을 뿌렸고, 제가 그 씨앗을 틔웠다. 19대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이 됐다. 그 이후 20대, 21대, 22대를 거치면서 민주당 후보가 최소 3명 이상씩 당선됐다. 20대 때는 12명까지 당선이 됐다.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이 대의명분을 선택해 달라.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동진 정책을,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저는 지역적으로나 계파로 보나 아주 열약하다. 노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을 지역구로 둔, 운명적인 친노(친노무현)이지만 계파 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다.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친노, 친문(친문재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전체를 봐야 된다. ‘시대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 ‘의원들의 집단 지성과 대의명분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권리당원 당원들에게도 ‘영남을 고려해달라. 민주당이 확장해야 할 땅이다. 지금 힘을 주지 않으면 영남은 불모지가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의장 도전...이재명정부 개혁 수행 절호 기회 북극항로 열리면 동아시아 국제 물류허브 부상 당 협지서 ‘낙동강벨트’ 이끌어...호남지원 절실

-국회 부의장이 된다면.
△22대 후반이제는 전국적인 선거가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개혁을 해내야 한다. 국회의장은 개헌 등 국가적인 아젠다를 설정을 할 것이다. 국회부의장은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저는 법조인이기에 국회의 제도와 운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의정 활동에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 또 국회의원 근무와 관련된 복지 제도가 열약하다. 사각지대에 있다. 제가 다쳐 보니 알겠더라. 공상 제도 자체도 없다. 국민들 형편에 맞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다. 또 국익을 위해 의원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의원외교 활동은 정부와 통합된 하나의 원팀이 되지 못했다. 하나의 시스템 아래 어떤 국회의원이 특정 국가에 가서 뭘 하더라도 정부와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12·3 계엄 당시 국방 전문가로서 활약했다고 들
었다.
△군 법무관으로 25년 가까이 생활하던 당시 계엄은 평생 업무였다.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계엄 연습을 했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계엄법도 연구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얘기가 나오던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계엄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두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야 한다. 의원외교관으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 실무자들에게도 재빨리 알려야 한다’ 등이다. 12월 3일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의원 중 한 사람이다. 답을 뛰어 넣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 24시간 안에 주요 인사들을 연금한다. 집에서 나올 때 혹시 누가 와 있나 조심스럽게 살피고 왔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께 ‘빨리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열고 저를 불렀다. 저는 ‘이 계엄은 불법이고, 국

헌문란이다. 쿠데타이다. 헌법 위반이고 내란이다. 가담한 군 지휘관들은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된다.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 드렸다. 헌정사에 쿠데타가 수 차례 있었지만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이나 12·12 계엄 당시에도 국회 외곽만을 포위했다. 그런데 국회 경내로 출동했다. 아주 특이한, 아주 안 좋은 쿠데타이다.

-민주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행정통합은 어떻게 추진하나.
△민주당 부울경(부산·경남·울산)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봉화마을에서 행정통합 결의를 했다. 실은 지방선거 전에 입법해서 전남광주처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 시간도 없고,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먼저 한 다음에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완성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폐기가 됐다. 부울경이 통합되면 800만명의 특별시가 된다. 전남광주특별시 인구는 400만 가까이 된다. 1200만 인구의 거대경제권 ‘남부 벨트’가 탄생하는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수도권과 경쟁하는 체제와 여건이 조성된다. 지방이 수도권 풀림을 극복하고 잘 사는 기틀을 놓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지와 배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마주와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현재 동아시아권에서 동남아시아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는 35일이 걸린다. 북극항로로 가면 25일로 단축된다. 물류비가 훨씬 절감된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아시아권의 국제 물류 허브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발맞춰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부산신항만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기본 계획을 짜고 있다.

-많은 일들을 해온 것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주식으로 따지면 블루칩이다(웃음). 처음부터 정치에 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하다 장군으로 전역한 후에 변호사를 한 3년 가까이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다. 기성 정치인들보다도 덜 정치적이다. 내 개인을 위한 정치를 안 한다. 나라와 국민의 삶 개선에 좀 더 헌신해보자는 생각이다.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가운데 최초로 4선을 했다.

하지만 당 기반이 취약해 낙동강 벨트를 지키기 보나 당권에 도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역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하기에... 나름대로 가지 지향적인 일을 많이 해왔고, 안보·국방 전문가로서 일해왔다. 그래서 언론에도 덜 노출됐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하정우 전 시수석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나섰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낙동강 서쪽에서 오는 바람을 차단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불거져 걱정이 다. 한 달도 안 남았다. ‘겸손하자’고 외치고 있다. 경남 동부권이 한 45%까지 올라오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65% 가까이 된다. 20%의 갭이 있다. 그 갭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

-전남광주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호남은 민주당의 정통적인 뿌리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지킬 수 없다. 양무호남 사무국,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호남 당원들이 중심을 잡아줄 때 민주당이 잘하고 정권도 재창출하고 우리나라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번에 영남을 주시하고 지원해 달라.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시정에 당선되면 정치적인 지역주의에 큰 균열이 갈 것이다. 희망을 걸고 있다.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게 된 것도 그런 균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몸 던지겠다는 각오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창원과 김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